

수도권의 빌딩숲을 벗어나, 농어민 곁으로

기고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필자는 전라남도 신안에서 나고 자랐다. 삶의 터전인 바다와 논·밭이 오늘날 내 정치적 신념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 내 고향은 인구소멸이라는 조용한 위기 속에 놓여 있다. 1970년대 17만 명을 넘었던 신안 인구는 현재 4만 명도 되지 않는다. 학교는 줄고, 일손은 부족하며, 청년들은 떠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신안만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농어촌 전체가 직면한 현실이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농어민을 대표하는 농협·수협 중앙회는 왜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 하는가?”

이에, 전남도의회에서는 지난 제390회 임시회에서 ‘농협·수협중앙회 전남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이전을 넘어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행정적 중심축을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어민 없는 도심 속에서 농

어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수도권 고층 빌딩 안 회의실에서 과연 트랙터 한 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부의 삶을, 어선 한 척으로 온 가족을 부양하는 어민의 현실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까? 농어민과 동떨어진 자리에서 농어민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괴리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쌀값 폭락 사태에서 드러난 가격 대응 실패, 수산물 판로 부진으로 인한 어민 고통, 기후위기 속 농어촌 현장 변화를 신속 반영한 정책 미비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언제나 ‘현장과의 거리’였다. 중앙의 시선으로는 현장의 진짜 문제를 포착할 수 없다. 현장에서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어민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약 60%’, ‘농산물 수확량 전국 1위’, ‘농어민 인구 비중 전국 최고’.

숫자만 보아도, 농협과 수협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역은 분명 전남이다. 전남은 이미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농생명 중심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다. 농협이 강조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이나 6차 산업, 디지털농업 등도 전남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여수·목포·완도 등 해양수산 거점 도시들이 탄탄히 뿌리내리고 있어 수산기반도 충분하다.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낡은 시스템을

벗어 넘어야 할 때이다. 지방이 중심이 되어야 농어촌이 산다.

단지 사무실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농어민 곁에서, 농어민의 숨결을 느끼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소멸은 어느 지역 어느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총체적 위기이기 때문이다. 이전이 ‘불편’을 의미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책임’과 ‘균형’을 의미해야 한다.

전남도에서도 농협과 수협 본사의 위치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저 또한 전라남도 의회 의원으로서 이 논의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농어민의 중심에 전남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농협과 수협은 농어민 곁으로 와야 한다. 그리고 그곳은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중심 전남이어야 한다. 농어민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작은 균형의 이동이, 우리 농어촌과 국가의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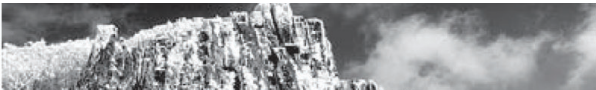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세상

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79회 공화국의 날 기념 행사에서 이탈리아 공군의 프레체 트리콜로리(삼색 화살) 곡예 비행 부대가 비행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서석대



지구촌 곳곳이 ‘기후 위플래시(hydroclimate whiplash)’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말로 ‘hydroclimate’는 수증기후, ‘whiplash’는 채찍질을 뜻하는데, 학계에서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다. 말 그대로 ‘기후로 채찍질을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기후 변화로 인해 극심한 무더위와 가뭄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홍수가 발생한 후에 곧바로 가뭄이 찾아오는 현상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위스의 한 산간마을을 대규모 산사태가 덮쳐 마을의 90%가 매몰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빙하에서 떨어진 얼음 조각과 막대한 양의 바위, 토사가 마을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드론 영상에 포착돼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산사태 원인은 알프스 빙하가 기후 변화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고 고산지대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지반이 점차 불안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일종의 ‘기후 위플래시’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0년 이내에 알프스의 빙하가 모두 녹아 사라

질 수 있으며, 이같은 재난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로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기상청은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며 큰 피해를 입었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최장 기간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올 여름은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의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기후 변화는 인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해졌다.

3일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앞다퉈 대응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서는 말뿐이 아닌 실천을 담보한 기후정책이 펼쳐지길 바라고 있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오늘 국민 선택에 대한민국 미래 달렸다

오후 8시까지 21대 대선 본 투표

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선 본 투표가 3일 시작된다.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는 누구든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좀 더 나은 후보를 가려내는 유권자의 신중한 한 표를 기대한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치 구조 개편과 권력 분산, 국민 통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분권 등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고착화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혁신적 정책도 내놔야 한다.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른 해법과 트럼프시대, 급변하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지형에 맞춘 외교적 문제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과 달리 21대 대통령 선거는 최악의 선거전으로 치러졌다. 특히 각 대선 후보 진영은 비전과 정책 대결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흠집내기식 흑색·비방 선거전에 집중하면서 선거전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진영논리에 빠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졸·여성 노동자 운운 발언도 이 시대 지식인의 가면을 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3차 TV토론에서 나온 상식을 벗어난 후보자의 발언도 유권자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주요 후보의 공약집이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나오는 등 후보들의 집권 비전과 정책 검증 시간도 부족했다.

그래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유권자의 귀중한 한 표가 국민의 리더를 만들고, 그 리더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간다. 텅 빈 나라 공간을 채우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개헌도 국민이 선택한 후보의 결정에 달려있다. 향후 5년간 국가 예산을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한 표당 7625만원의 결정권을 갖는다고 한다. 포기하면 안된다. 오늘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논란 ‘늘봄 학교’ 전수조사로 발본색원을

왜곡된 역사관 실험장 안돼

초등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통합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이며 지역 사회에 불안을 키우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이자격을 미끼로 조직적인 댓글 조작 활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서울 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해당 단체 소속 강사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리박스쿨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강사는 없다고 밝혔지만, 강사 채용과 프로그램 선정, 교육 내용 검토 등에 있어 사전 점검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는 초등학교 155곳에 3833명의 강사가, 전남은 5395명이 활동 중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학교나 외부 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강

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검증이 느슨한 외부 위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해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방과후 시간을 책임지는 공공교육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만큼 운영 강사나 프로그램의 검증은 철저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치적 편향이나 왜곡된 역사관이 개입될 여지는 단 한 치도 있어선 안 된다. 교육이 특정 이념에 의해 침식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자율적 사고 대신 왜곡된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역 학부모들과 교육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 축제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어난 영상이 상영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학교 현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강사 이력 검증 체계부터 민간자격증의 활용 실태, 외부 위탁기관의 검수 절차까지 전면적인 전수 조사에 착수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아이들의 배움터를 왜곡된 역사관의 실험장이 되도록 방지해서는 안 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